

주한미군 전력증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미국 국방부 <2012년 기지구조보고서> 분석 -

- 차례 -

1. 최근 3년간 주한미군 병력수 변동 현황

2. 주한미군 전력증강의 배경

- 1) 이라크, 아프간 전쟁 전후처리
- 2) '아시아로의 귀환'의 일환

3. 주한미군 전력증강의 문제점

- 1) 미국 필요에 따른 전력 증강으로 주권 침해
- 2) 미2사단 한강이북 잔류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파탄내는 것
- 3) 미군 주둔 비용 증가 및 불필요한 무기 구매 비용 부담
- 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 5) 전력증강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군축 역행

4. 요구

- 1) 미국은 늘어난 주한미군 9천명 즉각 철수해야
- 2)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집행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
- 3) 파탄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한미 간 전면 재협상
- 4) 국회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실시
- 5) 주한미군 출입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6) 전후처리 무기반입 중단

2013. 1. 3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

# 주한미군 전력증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 미국 국방부 <기지구조보고서> 분석 -

(평통사 미군문제팀, 2013. 1. 31.)

- 미 국방부 시설 및 환경 담당 부차관실(Deputy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Installations and Environment)은 전년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미 본토와 해외 등을 모두 망라하여 미군의 시설과 면적, 시설물의 잔존가치, 인원 등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는 <국방부 2000회계연도 기지구조보고서(국방부 재물조사의 요약)>(DEPARTMENT OF DEFENSE BASE STRUCTURE REPORT FISCAL YEAR 2000 BASELINE(A Summary of DoD`s Real Property Inventory))(이하 ‘<기지구조보고서>’)를 발간함.

- 평통사는 최근 3년간의 <기지구조보고서>의 미군(MIL)<sup>1)</sup> 통계를 기초로 주한미군 변동 추이를 밝혀 그 배경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1. 최근 3년간 주한미군 병력수 변동 현황

<표1. 최근 3년간 주한미군 병력수 변동 추이>

기준날짜	총병력 <sup>2)</sup>	지상군	해군	공군	해병대
2009. 9. 30	26,305	18,887	108	7,310	0
2010. 9. 30	31,839	24,502	97	7,224	16
2011. 9. 30	37,354	30,082	104	7,168	0

1) <기지구조보고서>의 인원 관련 통계는 ‘MIL’, ‘CIV’, ‘OTHER’로 구분됨. 이 분석자료에서 다루는 ‘MIL’은 현역군인, 방위군(Guard, 주지사의 통제 하에 시간제 또는 전업제로 근무, 유사시 연방 예비군 투입 가능), 예비군(Reserve, 현역군인과 상호 전환이 가능한 전업 또는 시간제 근무자)을 포함한 군사인원을 말함. 이 밖에 ‘CIV’는 군무원(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 ‘OTHER’는 국방예산과 관계없는 기타 민간인(기지 내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말함>(\* MIL : Identifies the military personnel identified as working at the site to include Active, Guard, and Reserve personnel, regardless of Military Service affiliation. \* CIV: Identifies the DoD civilian personnel identified as working at the site, regardless of Military Service affiliation. \* OTHER: Identifies other non-military personnel identified as working at the site(e.g., Non-Appropriated Funds (NAF), direct and indirect foreign nationals, contractor personnel).

2) 최근 3년 이전에 발간된 <기지구조보고서>의 주한미군 숫자는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04년 37,997명, 2005년 32,422명, 2006년 29,477명, 2007년 28,356명, 2008년 27,968명임. 미국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2003년 37,000명 수준이던 주한미군을 2004년에 5,000명, 2005년에 3,000명, 2006년에 2,000명, 2007~2008년에 2,500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08년까지 25,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음.

- 위 표는 주한미군 총병력이 2009년 9월말 현재 26,305명에서 2011년 9월말 현재 37,354명으로 무려 11,049명 늘어난 것을 보여줌. 모든 증가 인원이 지상군임을 알 수 있음.
- <기지구조보고서>의 세부 내역을 보면 평택 캠프험프리 인원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09년 3,536명, 2010년 4,880명에서 2011년 10,977명으로 2년 사이에 7,441명이 늘어남. 이는 이라크전 및 아프간전 참전 군인 철수에 따른 잉여인원 재배치의 결과로 추정됨.
- 그 밖에 인원이 소폭으로 감소되거나 증가되는 기지들이 다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평통사의 주한미군 병력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2012. 11. 27)에 대해 “2007년 이후 2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함. 주한미군사령부 공보관도 평통사측과의 통화(2013. 1. 16)에서 같은 답변을 함. 평택시 관계자(2013. 1. 16 통화) 역시 캠프 험프리의 미군수를 3,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도 통계치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 한미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주한미군 28,500명 주둔에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한미당국자들의 주장은 미군 병력수의 변동이 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한 한미당국(?)의 정치적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 국방부가 매년 전세계의 모든 미군기지의 재물조사 결과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통계로 정리하여 발간하는 <기지구조보고서>가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참고 : 일본과 독일의 최근 3년간 미군 변동 현황**

**<표2. 주일미군 최근 3년간 병력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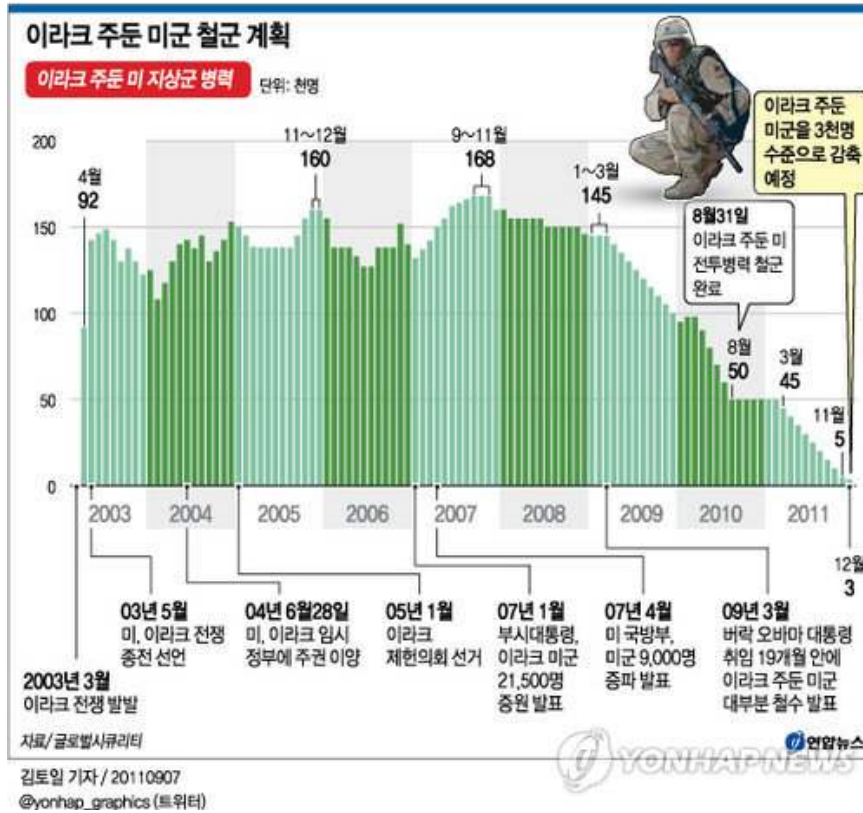
기준날짜	총병력	지상군	해군	공군	해병대
2009. 9. 30	41,512	1,485	8,509	13,951	17,567
2010. 9. 30	40,201	1,623	6,357	12,738	19,483
2011. 9. 30	87,182	1,581	7,807	13,627	64,167

**<표3. 주독미군 최근 3년간 병력수 변동 추이>**

기준날짜	총병력	지상군	해군	공군	해병대
2009. 9. 30	53,106	39,253	0	13,853	0
2010. 9. 30	62,427	48,270	0	13,391	766
2011. 9. 30	60,477	48,401	0	12,076	0

## 2. 주한미군 전력증강의 배경

### 1) 이라크·아프간 전쟁 전후처리



- 미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 계획에 따라 2009년 초 145,000명 수준이던 미군을 2011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함. 미국은 이 병력을 한국(1만1천여명), 일본(4만6천여명), 독일(7천여명), 아프간(4만여명) 등으로 분산 배치한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관련하여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2012년 10월 3일 워싱턴DC 소재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전략적 아시아 :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첫 번째로 '지난 10년간 미군이 개입해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두 전쟁이 끝나면서 미군 병력과 자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을 든 바 있음.(<매일경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중국 봉쇄 목적 아니다" 2012. 10. 05)

- 이에 따라 2009년 26,305명까지 줄어들었던 주한미군 숫자가 2011년 9월 말 현재 37,354명으로 늘어남. 이는 한미정상이 2008년 4월 합의했던 주한미군 숫자 28,500명보다 9,049명이 늘어난 것임.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도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미군이 각각 45,670명과 7,371명이 늘어남.

- 병력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투입됐던 전쟁물자가 대거 반입되고 있음. 다연장로켓포(MLRS), 에이태컴스, 기갑 전투력과 경찰장비, 특수 지뢰방호 차량(MRAP), 아파치 헬기, PAC-3 등이 그것임.

- 아파치 헬기 대대(24대)의 경우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국방부와 육군, 태평양사령부 등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 한국에서 빼냈던 군사력을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 함.(2012. 6. 12 <국민일보> "아파치 1개 대대 더..." 주한미군 전력 확충, 왜?)

- 레이먼드 오디에르노 미 육군참모총장은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에게 최근 미 국방부와 합참이 아파치 헬기 1개 대대(24대)의 한국 증강 배치를 승인했다고 통보 (<연합뉴스> 미 아파치헬기 1개 대대 증강 2013. 1. 11)

-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에 이어 아프간 전투작전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전장에 투입했던 수만대의 MRAP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며 "MRAP 유지비용은 대당 연간 1만달러에서~2만달러 가량이 소요된다."며 "미국당국은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구형 모델은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는 해외로 매각하거나 다른 연방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2012. 3. 9 <노컷뉴스> 미 이라크 전쟁 장비 유지에 골머리)

- 국방부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최근 엠랩(MRAP)을 한국군에 판매키로 우리 측과 합의했다."며 "이라크전 등에 사용하던 중고 엠랩 2000대를 구매해 2014년부터 육군 최전방 지역에 배치할 예정" 이라고 밝힘.(2012. 6. 18 <중앙일보> 미국, 이라크전 활약한 특수지뢰방호차량 '엠랩' 대당 1억에 한국제공)

- 주한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에서 사용한 특수 지뢰방호차량(MRAP) 78대가 지난 9월 부산항으로 들어옴.(2012. 9. 26 <연합뉴스> 주한미군, 지뢰방호차량 78대 부산항 도착)

- 이 같은 무기의 반입은 미국이 197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노후·도태탄약을 한국에 떠넘겨 저장관리토록 한 '전쟁예비물자(WRSA)'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노후·도태탄약을 장기간 저장 관리해주느라 막대한 예산과 인력, 부지를 내어준 데 이어, 2008년 WRSA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탄약 폐기 등의 비용까지 미국의 강요로 부담함.

- 한국과 일본,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대폭 증가를 포함한 전력 증강은 우선적으로는 이라크·아프간전쟁 전후처리를 위한 것이지만, 미국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미군병력을 축소할 경우 이들 국가에 증가된 해외 미군을 우선 축소함으로써 미군병력 수급에 대한 완충 역할을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토머스 래먼트 미국 육군성 차관보는 2012년 4월 25일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육군 병력을 가장 많았던 57만명에서 49만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 '아시아로의 귀환'의 일환

- 2011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을 천명.

- 2012년 1월 '신국방전략'에서 "우리는 (미군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쪽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발표. 이 문서는 중국의 지역강국으로의 부상이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영향을 끼칠 장기적인 잠재적인 요소라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지역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적 의도가 훨씬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주장.

-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2011. 6)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012. 6)는 안보상의 도전 과제들로 '지역에서의 군사 능력 및 활동의 증대', '우주·공해·사이버영역에서의 점증하는 위협' 등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지칭하는 것.

-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동북아 MD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에 집결시켜 공해전(公海戰, air-sea battle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적 전력을 효과적으로 격파하기 위해 공중, 바다, 육지, 우주, 사이버 능력을 통합하는 합동작전개념)를 구사하기 위한 전력을 증강하고 있음.

- 2000년대 초 럽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군사혁신(RMA)과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의 일환으로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 등과 함께 '한미 간 군사임무 전환'이 추진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후방지역 제독작전, 대화력전 수행본부 지휘와 통제, 해상 특수작전부대 작전 등의 임무 수행이 한국군에 넘겨짐. 그런데 미국이 '아'태 재균형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임무 수행 명목으로 각각 미 23화학대대, 다연장로켓포(MLRS)와 에이태컴스, 아파치 헬기 등의 병력과 장비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있음.

- 현재 상시 주둔하지 않는 미 해병대의 한반도 주둔까지 검토되고 있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는 "한국에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주둔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012. 7. 29 <서울경제> 주한미군 첨단 요격미사일 배치 강화해야)고 밝혔고, 미 외교소식통도 "미군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일본 오키나

와 해군기지 이전과 함께 기지를 떠나는 미 해병 중 일부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2012. 6. 18 <서울신문> 미 지상군 증강은 전작권 전환 무효화 전략?)고 밝힘.

### 3. 주한미군 전력증강의 문제점

#### 1) 미국 필요에 따른 전력 증강으로 주권 침해

- 나가는 것도 미국 맘대로, 들어오는 것도 미국 멋대로 -

- 한미양국은 부시정부 시절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강력히 추진한 군사혁신(RMA)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37,000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연차적으로 25,000명으로 축소하기로 함. 이는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미국의 필요와 함께, 북한의 전면 남침 가능성이 없고 남한의 방어 및 격퇴능력이 충분하다는 군사적 판단에 따른 것임.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미양국 정상은 2008년 4월 주한미군을 2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한미동맹 강화의 상징으로 내세움. 이후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매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을 거듭 재확인 해옴.

- 그런데 한미정상과 안보협의회의의 합의와는 달리 주한미군을 9천여 명이나 늘린 것은 오로지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외국군대를 추가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권을 제약하고 부담을 강요하는 것임. 또한 이런 사실을 국민과 국회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매우 심각히 유린되고 있음을 말해줌.

- 주한미군사령부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변동 사항을 통보조차 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제멋대로 출입시켰다면 그것은 우리의 국가주권을 유린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이고, 국방부가 주한미군 변동 사항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었다면 이는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임.

#### 2) 미2사단 한강이북 잔류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파탄내는 것

- 새집(평택)도 갖고 헌집(한강 이북)은 그대로 차지하고 -

-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한강 이북에 있는 용산미군기지 및 미2사단의 평택이전과 주한미군 25,000명 수준 감축을 전제로 2004년 한미 간 협정을 맺고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침.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2007년 3월에 발표한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 계획(MP)'에 따르면 확장된 평택 캠프 험프리에에는 미군 17,030명이 주둔하게 됨. 그런데 캠프 험프리에에는 이미 10,977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용산미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원(2011년 9월말 현재 6,219명)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캠프 험프리에에는 추가적인 수용 여력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주한미군 숫자가 37,000명선으로 유지된다면 불가피하게 경기북부의 기존 미군기지들 중 일부를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음.

-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늘어난 주한미군을 경기북부에 주둔시킬 명분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2003~200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해 한국군으로 이양했던 10대 군사임무를 다시 미군이 맡아 한국에 다시 들어오고 있음.

- 이에 따라 '후방지역 제독작전 임무' 수행 명목으로 내년 3월까지 23화확대대를 미국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경기도 의정부 소재 캠프 스탠리로 이전하고(연합뉴스 2012. 10. 6),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을 위한 '대화력전 수행본부 지휘와 통제 임무' 수행을 명분으로 2016년까지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평택기지로 재배치될 예정이었던 포병여단(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 나아가 2015년 12월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넘기면서 경기도 동두천과 의정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에 한국군 1개 여단을 배속시켜 한미연합군으로 편성하여 미군소장이 사단장을, 한국군 준장이 부사단장을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한국일보 2012. 6. 16)

- 이렇게 되면 평택미군기지가 확장되더라도 경기북부에 있는 기존 미군기지들 상당수는 유지되게 되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임.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지도 않는데 미군에게 평택에 최첨단 초호화 기지를 공짜로 선물하기 위해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쫓겨 나고 20조원 가까이 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꼴이 된 것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경기북부 미군기지까지 미군이 그대로 차지함으로써 반세기 넘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미군없는 풍요롭고 쾌적한 삶에 대한 열망 또한 철저히 짓밟히게 됨.

- 이처럼 미국은 결과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을 철저히 농락하여 갖은 방법으로 땅과 돈을 수탈하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3) 미군 주둔 비용 증가 및 불필요한 무기 구매 비용 부담

- 천덕꾸러기 미군도 OK, 쓰다 남은 전쟁 무기도 OK? -

- 주한미군이 한미당국이 주장하는 28,500명보다 9천여 명 늘어난데 따른 각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음.

- 미국은 원래 기존 미군기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쓰여야 할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을 어겨가면서 주로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에 기지가 유지될 경우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하고 이 자금 확보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게 될 것임.

- 카투사·경찰의 기본급·피복비 등 운영유지비, 사유지 임대료, 보상비, 매입비 등 부동산 지원, 기지주변 정비 및 훈련장 사용 등의 직접비용도 추가 부담하게 됨.

- 반환하기로 했던 경기북부의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공여 연장으로 인한 임대료가 간접비용으로 지불됨.

- 추가 인원 주둔으로 인한 제세(관세, 내국세, 지방세 등) 감면·면제, 상수도·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카투사 지원가치 평가, 여객·화물운임 할인 등 철도수송 지원 등의 간접비용이 추가로 지불됨.

- 한미정상이 합의한 28,500명보다 주한미군이 9천여 명 늘어나면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단순 계산하더라도 최소한 매년 약 2천1백억 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음.(국방부가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기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6,965억 원<sup>3)</sup>을 당시 주둔 인원 약 29,477명<sup>4)</sup>으로 나누어 1인당 지원금을 산출하고 여기에 추가인원 9천명을 곱한 값임.)

-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간 전쟁에 투입되었다가 처치곤란이 되어버린 무기를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막대한 무기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쓸데없이 낭비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하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국제문제협회(WAC) 연설에서 “한미 양국은 깨어 있는 동맹, 준비된 동맹, 능동적으로 질서를 창출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더 어려운 결정을 수반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당연한 비용으로 기꺼이 지불할 것” 이라고 강조(2012. 6. 18 <중앙일보> 전력증강 뒤엔 서면 ‘야전 본능’ 있다)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는 친미사대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함.

### 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3) 이 통계는 무상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하고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나 철도수송 지원 등을 누락한 것임. 토지임대료는 국방부가 실거래가의 10%→공시지가의 10%→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 그 밖의 공여지는 공시지가의 2.5%로 평가방식을 계속 변경함으로써 한국이 부담하는 평가액을 축소시켜 옴.

4) 미 국방부, <2007년 기지구조보고서>, DoD-94

## - 돌려준 작전통제권 도로 내놔? -

- 미국은 노무현 정부시절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 및 감축과 맞물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추진해 옴.
- 그런데 미국은 중국 포위를 노리는 ‘아시아로의 귀환’과 함께 주한미군을 37,000여명으로 늘리면서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를 번복하여 축소된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고, 한국군 일부를 편입시켜 미2사단을 한미연합훈련성부대로 편성하고, 한국군으로 전환되었던 군사임무를 미군 권한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축소된 한미연합사 창설은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대체하는 기구로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고, 한미연합훈련성부대를 창설하고 그 사령관을 미군이 맡는다면 기존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는 것보다도 군사주권 회복이 후퇴되는 것임. 군사임무 전환을 통해 한국군이 권한을 갖고 있던 특정 군사임무도 미국이 다시 장악하는 것 역시 군사주권을 제약하는 것임. 이 같은 사태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전히 빈껍데기로 만듦으로써 군사주권의 회복을 더욱 요원하게 함.

## 5) 전력증강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군축 역행

- 주한미군이 병력과 장비를 대폭 증강하고, 한국군도 미군이 전쟁에서 쓰다 남은 무기를 대거 사들이면 남한에 군사력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 등 주변국의 경계심을 높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필연.
- 이는 관계당사국 간 불신과 적대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군축 실현에 걸림돌이 됨.

## 4. 요구

### 1) 미국은 늘어난 주한미군 9천여 명 즉각 철수해야

- 한미 정상 합의보다 주한미군이 9천여명 늘어남에 따라 주권 침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파탄, 한국의 부담 가중, 전작권 환수 백지화, 한반도 평화 위협 등 온갖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남한군 전력만으로도 북에 대한 방어력을 갖고 있고 기존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추가 전력이 안보상 필요한 것도 아님.
-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늘린 주한미군 9천명을 즉각 철수시켜야 함.

## 2)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집행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

- 미국의 사정에 의해 주한미군이 9천명이나 늘어남에 따라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평택에 미군기지를 건설하고도 경기북부의 미군기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현저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협정 이행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연히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 집행도 중단해야.

## 3) 파탄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한미 간 전면 재협상

- 2002년 3월 29일에 서명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본협정 제7조(개정)는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2004년 10월 26일에 서명된 LPP개정협정 제2조는 “1. 양당사국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제7조에 따라 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주한미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재는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임. 따라서 한미당국은 관련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경기북부 주민을 비롯한 한국민에 심각한 부담과 충격을 안기고 국회의 의결을 무력화시킨 사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해야 함.

## 4) 국회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실시

- 4대강사업에 버금가는 총 20조원 안팎을 우리 국민 혈세로 부담하게 될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중대한 변동 요인이 발생하였는 바, 그 원인과 협정에 명시된 이전 시기 위반,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통한 한국의 불법 부당한 비용 부담 등 미군기지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실시해야.

## 5) 주한미군 출입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주한미군 출입에 대한 협의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는 주한미군 출입에 대한 국회 보고 등 투명성 확보 필요  
- 주한미군 출입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 6) 전후처리 무기반입 중단

- 이라크전 및 아프간전 전후처리를 위한 주한미군의 무기반입과 한국에 대한 무기도입 강요도 중단해야